

# ‘성공신화’의 허구, 불평등 구조를 알면 평등이 보인다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쓴, 신광영 교수  
사회학자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지음 | 을유문화사 | 288쪽 | 값 12,000원



“국민 93퍼센트, ‘빈부격차 심각’”

지난 달 한 일간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 제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3.5퍼센트가 빈부격차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9.5퍼센트를 차지해 총 93퍼센트나 되는 응답자들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에 대한 이러한 시민들의 체감이 엄살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왜 빈부격차, 즉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을 통해 IMF

지원체제 이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 경제위기는 중산층 아닌 노동자의 위기

“일제시대부터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 계급관계의 변화를 밝히고 계급 및 계층연구사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계급불평등체제를 일시적이고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의 변화가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구조적 사회실패라는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는 정주영 등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성공신화는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의 성취가 개인의 노력이나 운에 달렸다는 ‘상식’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 교수는 경제위기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위기'라는 점을 드러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나 전문직·기술직 종사자가 포함된 중간계급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노동자계급은 고용환경의 변화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기는 심각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계급 내에서조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들을 흔히 노동빈곤층이라고 하는데 2002년 그들이 받은 한 달 평균 월급은 73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수준이었습니다.”

사오정·오륙도 등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위기론'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엄밀히 말해 중간계급 중 관리직 종사자의 위기다. 중간계급 가운데서도 관리직 종사자만 줄어들었을 뿐 전문직과 기술직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확대 역시 경제위기가 계급구성에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출신 실업자들이 도산이나 실직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 교수는 이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거나 그동안의 인맥을 활용해 다단계를 하거나 그도 아니면 택시운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직업은 보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확률도 적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이들도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조기퇴직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불평등 구조 이해하고 바꾸는 노력 있어야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불평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다. 신 교수는 설날만 되면 은행 앞에서 경비를 서는 식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불평등 정도는 국가의 정책, 노동운동의 성격, 경제상황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위기'에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피고용자 수를 줄임으로써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정을 낳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부동산은 전형적으로 '정부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다. 극심한 지역간 불균등 성장으로 인한 주택 자산가치의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부의 격차는 평생

임금노동을 통해서서는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신 교수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 교수가 주목하는 복지국가 모형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스웨덴과 일본, 미국 등을 비교해 박사논문을 받은 바 있는 신 교수는 스칸디나비아가 구성원간의 빈부격차가 제일 적고 범죄율도 제일 낮은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과 정책 탓에 미국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식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어권의 일부 국가들뿐입니다. 물론 조직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 모델을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만 유럽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우리사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서구담론 아닌 우리만의 계급 이론 필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서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도시다. 국권 상실과 6·25,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농촌은 농촌대로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도시는 도시대로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다. 최근 2,30년 사이에는 그야말로 폭발하듯이 사회와 경제가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00년 유럽의 이사율이 2~4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의 이사율은 19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다. 신 교수 자신도 집성촌이었던 고향 서울 봉천동이 갑작스럽게 도시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당시 봉천동 고개에 이주한 수재민을 통해 빈부의 격차도 경험할 수 있었다.

“과거 사회학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서구에서 수입한 담론으로 넘쳐나는 시대였죠. 계급에 대한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근현대사는 사회학의 큰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이론을 만들어 낼 시점에 온 것입니다. 사회학은 이러한 변화를 이론화함으로써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교수는 다음 책에서는 계급운동(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자들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이익단체로 행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고 신자유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의 결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보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국의 실상을 알리는 책을 준비중이다. 빈부격차와 취약한 복지 등 일반인들이 모르는 미국의 모습을 통해 미국이 얼마나 '뺏지 말아야 할 나라'인가를 보여줄 예정이다. ❧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